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을 위한 서설(序說)

- 방법으로서 관문도시와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이 홍 규** · 김 동 규***

요약

미-중관계가 패권경쟁의 심화로 국익을 중시하는 국가 중심적인 동아시아 담론 추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민사회 중심으로 대안적 동아시아 체제를 모색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소리 없이 배제되고 차별받던 존재들의 양상, 즉 동아시아 서발터니티에 주목해야 한다.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문제를 연구하여 이들이 처한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 이 문제가 동아시아 공동의 쟁점으로 부각될 때, 비로소 국가 중심의 동아시아 담론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의 동아시아 담론이 형성된다. 또한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방법으로서의 관문도시’라는 인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문도시를 개방/폐쇄, 이음/단절이라는 이중적 성격이 작동하는 권력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서의 관문도시’라는 인식틀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서발터니티 문제를 연구하여 시민성과 공공성 구축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방법으로서의 관문도시, 동아시아 담론, 시민사회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2S1A5C2A02091373).

** 동서대학교 캠퍼스아시아학과 부교수, 중국연구센터 소장.

***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I. 문제제기

탈냉전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래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사고하면서 공동체 건설을 상상하는 많은 담론들이 동아시아에 존재했다.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냉전 시기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 체제로 재편된 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는 양 진영의 힘이 격돌하는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1980년대 말 이래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1990년대 초 한국은 중국 등 사회주의권과 수교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지역의 분단 수준이 완화되면서, 동아시아 리저널(regional)¹⁾ 전망이 가능해졌기에, 동아시아 담론이 형성되고 번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다(윤여일 2016, 26-27).²⁾ 더욱이 90년대 이후 동

1) 통상 리저널(regional)은 ‘지역’으로 많이 번역된다. 하지만, regional의 어원이 군사적 의미를 배경으로 하는 ‘통치’(regime)와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마루카와 데쓰시 2008, 8), 흔히 사용되는 번역어인 지역과는 다른 용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루카와 데쓰시는 『리저널리즘』(2008)에서 동아시아를 언급하는 맥락에서 리저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동아시아 리저널(East-Asian region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리저널(East-Asian regional)’이라는 개념은 지역, 국가, 글로벌과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리저널이라는 개념이 권력의 작용을 지시하는 개념이므로 동아시아를 어떤 불변하는 실체적 단위로 간주하지 않고, ‘방법’을 통해 매번 다르게 등장할 수 있는 단위로 간주할 수 있다. 덕분에 동아시아에 작동하는 다양한 힘의 ‘역학’을 통해 동아시아가 다르게 표상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사용의 전략은 ‘방법’이라는 개념으로 활용하는 이 논문의 접근법을 위해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론적, 개념사적 맥락을 추적하여 적당한 번역어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2) 윤여일은 1990년대 이후 형성되고 2000년대까지 번성한 동아시아 담론을 네 가지 계열로 분류한다. 즉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 동아시아 대안체제론, 동아시아 발전모델론,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이 그것이다. 동아시아 문화정체성론은 동아시아 역내의 국가, 민족과 같은 구성 단위들은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며 그 특성은 서구문화와는 달리 독자적인 것이며 그로써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동아시아 한자문명권론, 유교문명권론, 동아시아문화론 등이 포함된다.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은 사회주의권의 몰락,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화라는 세계질서의 급변의 와중에서 서구중심적 근대체제를 대신할 대안적 사회원리를 모색하는 입론으로 동아시아 탈근대주의론, 동아시아 탈민족주의론, 동아시아 탈국민국가론 등을 포괄한다.

아시아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사회문화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중관계가 패권경쟁의 형세로 돌변하자, 동아시아 역내의 협력과 공동체 추구, 즉 동아시아 리저널리즘(East Asian Regionalism)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커졌다. 동시에 이를 지탱하던 동아시아 담론의 정당성도 의심받고 있다. 심지어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사람들이 미/중 사이의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문제를 국가 중심주의적으로 접근한다면,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리저널리즘과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담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중심의 논리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시하므로 미중 대결의 국면에서는 현실적인 국익을 위해 동아시아 협력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도 미/중 사이의 치열한 패권경쟁 속에서 소멸되고 말 것이다.

물론, 그동안 변성했던 동아시아 담론들 가운데, 동아시아의 정체성이나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기존 국가중심주의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축적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자본주의/사회주의라는 서구적 근대성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대안적 근대성을 찾는 ‘비판적 동아시아론’도 활발히 전개되었다(김비환 2016, 146-148). 이러한 ‘비판적 동아시아론’은 다른 동아시아 담론들과 달리, 시민사회 중심으로 대안적 동아시아 체제를 모색하는 논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은 동아시아 국가, 특히 신흥발전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을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사회적 특성으로부터 설명하려는 입론으로 유교자본주의론,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등이 포함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은 역내 국가들의 공조, 나아가 지역 통합의 추진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제고하려는 입론으로 여기에는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론이 대표적이다(윤여일 2016, 138-156, 230-261).

의인바, 미-중 경쟁의 구도를 돌파해야 하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판적 동아시아론’은 국가 중심의 논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추수하는 논의와 달리 시민사회적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자율성에 입각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규범을 내장하고 있기에, 더 나은 민주적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비전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³⁾

다만 동아시아를 대안체제로 상상했던 기존의 ‘비판적 동아시아론’은 시민사회 내부의 엘리트주의를 노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 제출된 대안적인 ‘비판적 동아시아론’은 동아시아 지식인과 엘리트 그룹 내부에서만 맴돌았을 뿐, 실상 동아시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담론은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더욱이 기존 ‘비판적 동아시아론’에는 동아시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동아시아의 모순을 ‘국가’ 단위에서 조명해야 한다는 무의식이 존재했다. 심지어 동아시아의 초국성(超國性)을 이야기할 때도 그 출발 단위를 국가로 당연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비판적 동아시아론’이 상상하는 대안적 동아시아 공동체는 동아시아 ‘국민’만을 호명하는 담론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상력으로는 모든 동아시아인을 포괄하는 사상과 담론이 될 수 없다. 새로 제출될 동아시아 담론은 소수 지식인이나 엘리트의 담론이 아니

3)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전쟁터였던 유럽은 민주적 공동체가 된 이후에야 평화가 정착되었다. 이는 민주적 동아시아권역주의의 형성이 동아시아 리저널 단위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미/중 패권경쟁 구도를 추종하는 사고 하에서 민주적 동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실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규범을 명분으로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을 견인하여 대(對)중국 대립 구도를 구축하면서 미국의 개입이 배제된 동아시아 리저널리즘에 반대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을 비난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일당 체제를 정당화하고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형성과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신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주적 동아시아 리저널리즘을 상상하고 그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구현에 부응하는 동시에 역외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시민사회 중심의 대안적 동아시아 리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경로다(이흥규 2020).

라, 동아시아 ‘시민’, 즉 동아시아의 모든 ‘사람’의 담론이어야 한다.

동아시아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접근을 위해 이 논문은 일종의 규제적 이념에 입각한 서술의 관점을 취했다. 규제적 이념이란, 현실에 존재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견인하는 이념으로서, 현실적 효과를 내는 비판적 이념을 말한다(박도영 2014, 142). 소위 인권 개념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 새롭고 다양한 권리를 만들어내는 규제적 이념이다. 이런 개념 전략의 초월적 성격 때문에, 이 논문이 초국적 관점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점을 구체적 현실에 적용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고안된 개념이 ‘동아시아 서발터니티(East Asian Subalternity)’다. 동아시아 서발터니티는 동아시아 리저널 단위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힘의 관계에서 배제된 채 취약한 처지에 빠진 존재들의 존재론적 특성을 종합한 개념이다.⁴⁾

즉, 동아시아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동아시아 ‘시민’ 담론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존재는 동아시아 리저널 단위에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존재, 즉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취약한 존재들이다.⁵⁾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런 존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동아시아 서발터니티(East Asian Subalternity)’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가 대안적 동아시아를 만드는 다양한 맥락(context)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김동규 2023, 369-402).

예컨대 동아시아의 다양한 서발터니티의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 자기 목소리를 되찾고, 이들의 삶을 옥죄고 있던 구조가 폭로된다면, 동아시아는 새로운 공적 구조를 마련하여 이들을 환대(hospitality)해야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논문의 II장 참조.

5) 물론 취약성(vulnerability)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층적이다. 왜냐하면, 취약성은 가장 독특한 개인에 관한 것(the singular)이기도 하고,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the individual)에 관한 것이기도 하며, 특정 집단 전체(the particular)와 관계하는 것이기도 하며, 몸을 가진 모든 인간(the universal)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취약한 존재에게는 서로 많은 폭력들이 중층적으로 작동한다.

한다는 정당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⁶⁾ 동아시아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는 존재들의 문제들이 동아시아 혁신의 쟁점으로 부각할 때, 비로소 국가 중심의 동아시아 담론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의 동아시아 담론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기존 서발턴(subaltern) 개념의 의미 확대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다. 이어서 서발턴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배제된 존재를 지칭하는 유사 개념들을 개괄한 뒤, 이 모든 개념들을 종합하여 ‘서발터니티(Subalternity)’라는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가 갖는 독특한 의미를 설명하고 그 연구사적 맥락을 평가할 것이다.

본래 서발터니티 담론은 서구 중심주의 사고 및 오리엔탈리즘에서

6) 환대로 번역되는 hospitality는 레비나스와 그에게 영향을 받은 데리다 사상의 주요 개념이다. 환대는 단순한 환영(welcome)이 아니라, 주체의 자리를 통째로 의문시하는 이방인(타자)을 새로운 주인으로서 모시는 일이다. 이 개념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데, 주체는 스스로 주인인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방인을 배제하고 추방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이 배제와 추방은 주로 ‘정당성’과 ‘정의’를 명분으로 진행된다. 타자는 기존 사회에서 불온하고, 공포스러워, 위협한 존재로 간주되어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자의 입장에서 본 주체의 행위는 자신들을 생사여탈의 상황에 빠뜨린 폭력에 불과하다. 이 연구의 서발터니티가 바로 이런 취약한 타자의 존재론적 특성을 지시한다. 여기서 배제된 ‘취약한(vulnerable)’ 타자는 주체에게 ‘죽이지 말라!’는 거역할 수 없는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권위적 존재로 주체 앞에 등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 **타자는 취약하지만, 가장 막강한 윤리적 명령을 행사하는 ‘위력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타자는 현실적으로는 주체보다는 약하지만 윤리적 차원에서 타자는 주체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여기서 주체의 자리는 위협을 받는다. 이를 **주체의 임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주체가 이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주체는 스스로 정의라고 행했던 이전의 행위가 폭력에 불과함을 각성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이에 제대로 반응한다면, 주체는 자신의 자리를 모두 혁신하면서까지 타자를 맞이해야 한다. 이러한 타자의 힘을 **임계적 공공성**으로 표현한다. 타자는 이런 점에서 윤리적 존재이자, 주체를 각성하게 만드는 취약한 타자가 된다. 이런 각성의 상황에서 주체는 타자를 배제했던 행위를 사과하고, 주체를 **모셔 들일** 수밖에 없다. 이를 환대(hospitality)라고 한다. 이것이 취약한 타자 앞에서 주체가 행하는 책임 있는 행위다. 책임이 응답(response) 할 수 있음(ability)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환대는 취약한 타자의 위력적 명령에 제대로 응답하는 책임의 윤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마뉘엘 레비나스(2018) 그리고 자크 데리다(2004)를 참고. 임계적 공공성에 대해서는 김동규(2017, 2020, 2021)를 참고.

벗어나려는 탈식민주의 기획으로서 인도를 포함, 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 등장한 담론이었다. 그래서 담론의 실질적 영향력 역시 식민주의 흔적을 넘어서지 못했다.⁷⁾ 하지만 이 개념이 최근 서발터니티를 생산했던 유럽 리저널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적 지점을 획득하면서 그 기세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서발터니티라는 개념은 서구를 수용한 비서구의 내적 한계를 비판함과 동시에 서발터니티를 생산했던 서구 자체의 문제도 비판할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리저널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동아시아 서발터니티(East Asian Subalternity)’라는 개념은 동아시아 리저널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생산해내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 입장에서 서구의 한계를 폭로할 수 있는 날선 개념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만의 서사가 등장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리저널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은 역사적 담론을 생산한 격이다.⁸⁾ 최근 등장한 남아시아 리저널 담론, 아프리카 리저널 담론, 그리고 남아메리카 리저널 담론과 비판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담론의 영향력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긴장은 유럽 리저널 담론을 성찰케 하는 외적 자극이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실효성 있는 새로운 글로벌 담론을 생산토록 자극할 것이다. 반대로 미시적으로는 새로운 지역(local) 담론 생산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서발터니티’와 ‘시민성(Citizenship)’ 연구의 새로운 출발

7) 근대 역사학, 즉 식민주의 역사학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하여 제3세계의 역사를 정당화해 왔다. 민족주의 역사학이나 정통 맑스주의 역사학은 이를 비판했지만 이들 또한 서양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즉 민족주의 역사학은 제3세계에서 서구와 같은 진보(근대화)의 근거 또는 맹아가 있음을 보여 주는 식으로 대답했고, 정통 맑스주의 역사학은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지 못했고 계급과 같은 서구 보편적인 틀로 제3세계 역사를 해석하여 서구 보편적 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위 주체의 행위와 의식을 지워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만 서발터니티라는 비서구적 하위주체의 특성이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김택현 2003; 2012).

8) 동아시아라는 리저널은 제국주의 하의 식민 혹은 반식민의 역사, 냉전 권력과 개발 독재하의 억압과 배제, 신자유주의화의 차별 등 공통으로 경험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조건을 박탈당한 존재들이 중층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점으로 ‘방법으로서 관문도시(the Gateway City as a Method)’라는 아젠다(agenda)를 제시할 것이다. ‘관문도시’라는 출발점은 주로 국제물류학에서 사용되어온 도시 개념이지만, 이 논문에서 관문都市는 단순 연구대상이 아니라 연구 방법론이자 접근법이다.

관문都市는 개방/폐쇄, 이음/단절이라는 이중적 성격이 작동하는 권력의 공간이자, 인식론적인 공간이다. 국가권력의 중심에서 보자면, 관문都市는 그 국가의 물리적 최외곽이고, 그 권력 바깥에서 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물리적 최접점이다. 이런 경계지에서 배제/포용의 권력이 매우 민감하게 작동한다. 이 공간을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문제와 결합시키면 우리는 동아시아 리저널을 새롭게 보는 비판적이고 효율적인 인식틀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관문都市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아시아 시민이라는 존재론적 특성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서발터니티라는 낯선 존재를 향한 권력의 작동 방식이나 역학도 관문都市라는 경계지대에서 가장 살펴볼 수 있다. 관문都市는 동아시아의 권력 동력학과 그 권력의 다양한 정체를 비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지정학적 장소다.

취약한 존재들에게 흔히 다양한 폭력이 가해진다. 이 논문은 그 존재들을 서발터니티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동아시아 리저널 단위’ 전체의 문제로 살펴보는 접근은 없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관문都市’를 테스트베드(test-bed) 삼아 동아시아 리저널 단위의 폭력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독특한 모순에서 가장 보편적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동아시아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개인이 겪는 폭력도, 그와 관련되어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보편적 폭력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와 ‘방법으로서 관문都市’라는 방법을 결합하면, 동아시아 문제를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새로운 동아시아 시민성과 공공성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동아시아 리저널에서 인권을 가진 주체를 ‘시민’이라 한다면, 실제 시민이 되지 못하는 배제되고 취약한 존재들의 문제와 특성, 즉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문제는 ‘관문도시’에서 배제/포용의 역학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는 미/중 대립으로 동아시아가 다시 편 가르며 서로를 혐오하는 위기 국면 앞에서 국가중심주의로 경도되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엘리트주의로 해법을 제시하려는 기존 담론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실천적 시민’ 담론과 비전이 여기서 출발하기를 바란다.

II. 서발터니티 담론과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

1. 서발턴 담론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서발터니티

서발턴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그 지칭 대상이 불분명했다. 감옥에서 은어로 사용되었으며, 종속된 존재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그 존재를 명시할 수는 없었다. 이 개념이 소위 소극적(negative) 정의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빼고 난 ‘나머지’로 정의됨으로써, 서발턴은 종속된 존재이지만, 심지어 명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적극적(positive)으로 정의된 존재의 외곽에 위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들이 종속된 사람인지를 명시할 수 없었다.⁹⁾

서발턴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마르크스주의 전통 하에서 ‘은어’로 활용되었을 때, 이 개념은 계급 ‘외부’의 존재, 즉 비계급을 의미했다. 이후 이 개념이 남아시아에서 활용되면서 비유럽인이면서 종속된 존재

9) ‘subaltern’ 어원은 다음을 참조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word/subaltern#etymonline_v_22241 alter의 어원 검색도 동일하다. https://www.etymonline.com/word/alter#etymonline_v_10924 (2023. 03. 24) 은어의 사용에 관해서는 최성희(2014, 245)를 참고.

를 의미하게 된다. 이후 여기에 젠더적 의미가 부가되면서 비유럽인이며 비가부장인 존재를 지칭하기도 했고, 포스트식민주의와 결부되어서는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의미가 아닌(비의미), 또는 아직 의미가 아닌(미의미이자, 의미화 가능한) 존재를 지칭하기도 했다(강옥수 2002, 135; 최성희 2014, 247-249; 스피박 2013, 394).

존재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를 우리는 현실 세계에 실재함에도 실재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없다. 서발턴은 존재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다. 서발턴이 재현 불가능하다는 스피박의 테제가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럼에도 서발턴을 규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외부성’이 그렇고, 재현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잠재성’이 그렇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특정 사회에서 타자로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또는 내부에 존재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된다는 점에서 서발턴이기는 ‘외부성’이라는 존재형식을 가진다. 아울러 이들 존재가 추후 가시화될 경우, 그 등장만으로 기존 사회의 문제와 폭력성이 폭로되며, 동시에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혁신의 잠재력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공성을 열 수 있는 잠재성도 갖는다. 그래서 이 외부성과 잠재성이 결합되면, 포함되지 ‘않은’ 존재들의 귀환을 통해 기존 질서가 전복될 수 있다는 ‘전복성’을 획득할 수 있다. 끝으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배제의 지식·권력이 작동한 지역의 특수성(locality)을 드러낼 수 있다. 서발턴을 통해 특정 지역에 특화된 그 사회적·역사적 모순을 드러낼 수 있다(베벌리 2013, 88-89, 219). 즉, 서발턴은 자신의 종속성과 자신을 배제한 지역의 장소성 그리고 그 장소의 권력 구조를 드러낸다.

예컨대 기존 서발턴 연구는 이탈리아,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리저널리티(regionality)를 드러냈다. 아울러 서발턴 문제에 젠더적 차이나 인종적 차이 등이 고려되면서, 서발턴을 생산한 지

식·권력 단위의 문제와, 이에 기반을 두어 서발턴을 투명하게 재현하고 복원하려던 지식·권력 엘리트 주체의 허위의식 등도 비판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서발턴은 자신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스스로를 재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가능성을 지칭하는 이름이 될 수 있었다(스피박 2013, 408, 410; Spivak 1988, 275).

자신을 배제한 기존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는 서발턴의 모순 때문에, 서발턴 개념을 사용할 때 지속적인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이 곤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서발턴을 생산하는 기존 권력을 비판할 수 있다. 이 비판이 전복 가능성과 결부되기 때문에, 서발턴은 실로 부정의한 ‘현실’을 전복시킬 수 있는 ‘비현실(유령)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서발턴 개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율배반이다. 이런 서발턴의 이율배반은 일종의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다(Prakash 2000, 288).

서발턴 연구가 회자되면서 서발턴 개념과 유사한 다른 개념들도 생산되었다. 예컨대 포스트모더니즘은 차이의 정치를 주장하면서 주체와 타자 간 변증법적 대립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객체의 특성을 드러냈고, 포스트식민주의는 유럽 내부의 타자만이 아니라, 유럽 외부의 타자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종속적 객체의 특성을 드러냈다(베벌리 2013, 68; 애피야 2008, 31).

대표적으로 ‘소수자’ 개념이 그렇다. 여러 사상가들이 이 개념을 사용했다.¹⁰⁾ 크리스테바는 주체도 객체도 아닌 자리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곤란을 겪는 혼종적 존재로서 ‘비체(非體: *abject*)’라는 개념을 제출했다.¹¹⁾ 아감벤의 ‘호모사케르(*Homo Sacer*)’는 주로 주권 개

10) 들뢰즈와 가타리가 대표적이다. 이 개념은 정작 소수자가 양적으로는 많고, 다수자가 양적으로는 소수라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이는 소수자 개념이 양적 단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이는 가치 척도와 관련된다. 그래서 소수자를 이해할 때는 비주류로, 그 비주류 중에서도 주변인(*marginals*)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대해서는 고병권(2007, 6)을 참고.

념이나 법개념과 연결되는데, 법적 예외상태에서 생사여탈의 치명적 상황에 노출된 존재를 말한다.¹²⁾ 랑시에르의 ‘뭉이 없는 자’는 계급으로 동일화될 수 없는, 즉 계급 내 비계급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계급을 지시하는 기존 의미와는 다른 타자(프롤레타리아와는 다른 존재)를 말한다. 뭉이 없는 자는 한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 또는 권리를 갖지 못하는 배제된 소수자들인 잉여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보편성과는 거리가 먼 소수자와 달리, 특정 사회에서 공통적인 것 또는 보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뭉이 없는 자는 새로운 보편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공통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다.¹³⁾ ‘크레올성(Creole)’, 즉 혼혈성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서발턴과 관련된 대표적 개념이다. 미놀로는 언어 사용의 측면으로 볼 때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람, 영토, 국적, 기억, 종교의 뒤섞임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크레올성을 사고한다는 것은 다양한 언어의 경계를 통해 서발턴의 경계성을 인지하며 사고하는 것이라 보았다.¹⁴⁾

-
- 11) 비체는 혼종성만이 아니라 서발턴의 재현불가능성이라는 특징과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줄리아 크리스테바(2001)를 참고.
 - 12) 호모 사케르가 주권개념이나 법개념과 연결되는 이유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라는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의 주장에 의지하여 ‘호모 사케르’ 개념을 주장하는 아감벤의 입장에 따른다. 이에 대해서는 칼 슈미트(2010, 16-28); 조르조 아감벤(2008, 50, 55-60); 조르조 아감벤(2009, 17-19, 63-64, 67-8)을 참고. 호모 사케르는 서발턴을 취약성으로 사고할 때 적용하기 가장 좋은 개념이다. 『호모 사케르』에도 나오듯 난민이 이를 표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예외 상태에서 생사여탈이라는 치명적 취약성에 노출된 존재며, 국가라는 정치 단위가 어떻게 인권의 보편성을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 13) 랑시에르의 언급에 대해서는 자크 랑시에르(2013, 49 각주)를 참고. 이런 특성은 서발턴의 부정성이나 전복성과 관련된다. 아울러 한 사회에서 통약불가능하고, 배제된 특정 계급으로 전형화되지도 않으며, 비가시적이어서 주체화될 수 있는 선 너머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서발턴의 특징을 다분히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전형을 넘어서 프롤레타리아를 서술하고 있는 자크 랑시에르의 『프롤레타리아의 밤』을 참고, 뭉이 없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는 자크 랑시에르(2015, 3, 6, 43, 114, 182)를 참고.
 - 14) 미놀로는 국가언어의 단일 원리적 순수성을 뛰어넘어야만 비로소 크레올성을 사고할 수 있다고 한다(미놀로 2013, 401-402).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크레올성을 통해

서발턴과 그 유사 개념들이 등장한 이후, 우리는 사상적으로 테제와 안티테제라는 이항대립(正/反)의 변증법적 논리를 탈피할 수 있었다. 서발턴 이전의 타자는 노예(헤겔) 아니면, 프롤레타리아(맑스)였다. 여기서 타자는 기존 체계를 전복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편성으로 가는 계기가 되지만, 이항대립의 나머지를 고려하지 않는, 즉 제3항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새로운 폭력의 담지자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노예의 주인 됨은 곧 새로운 ‘전체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도 생겼다. 이는 이항대립이라는 방법론 자체가 가진 문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에는 변증법 대신, 제3항 이상을 허용하는 ‘역학’이라는 개념을 사유를 자주 활용한다(지젝 외 2009, 30-40). 다시 말해 ‘변증법’이 테제와 안티-테제라는 이항대립을 기준으로, 한 쪽이 한 쪽을 지양(Aufhebung)함으로써 새로운 통합(전체주의)을 생산한다면, ‘역학’은 다양하고 복잡한 힘의 관계를 전제하고 인정함으로써, 손쉽게 전체주의로 함몰되는 사유를 제공하지 않는다(한국 프랑스철학회 2018, 361). 다시 말해 변증법이 정이 반을 지양해서 새로운 합으로 이르는 종합을 표방하기 때문에, 변증법은 흔히 새로운 전체주의로 가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반면에 역학은 기존 세계에 언제든지 새로운 차이와 균열이 ‘야기’될 수 있음을 긍정함으로써 전체주의로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보편성을 창안하려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래서 역학적 사유를 통해 생기는 차이와 균열은 차이와 균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보편적 질서를 생산하도록 촉구하는 잠재력도 갖는다.

앞서 서술한 서발턴과 유사한 개념들이 서발턴 개념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종속성을 드러내는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이 주요하게 드러내는 주된 특징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 만들어볼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서발터니티(Subalternity)인데, 서발터니

‘경계성’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는 이 연구가 사용하는 주된 개념인 서발터니티가 왜 관문도시라는 경계 장소와 결부될 수 있는지를 암시한다.

티는 앞서 언급된 다양한 하부개념들의 ‘역학’을 내포하고 있는 일종의 레이더 차트(Radar Chart)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발터니티**라는 개념은 그 내부에 치명적인 **취약성**, **재현 불가능성**, **불투명성**과 **오염성**,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성**과 **전복성**을 새겨두고 있다. 그래서 서발터니티를 통해 특정 사회에서 극도로 배제된 존재들이 겪는 다양하고 중층적인 폭력의 실체를 고발할 수 있다. 서발터니티 개념은 종속된 존재와 그 종속성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유용한 인식적-실천적 방법이 될 수 있다.¹⁵⁾

서발턴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제3항‘들’의 등장은 지역적으로 특수하고 특정한 상황의 부산물이지만, 객관적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를 줄리앙 고는 관점주의적 실재론(perspectival realism)의 성격을 갖는다고 표현했다. 따라서 서발터니티라는 개념은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가 갖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이론과 개념을 배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Go 2016, 165; 채오병 2019, 328).

실제로 서발턴 개념의 등장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은 위와 같은 유사 개념을 등장시킴으로써, 다양성과 차이의 전략을 구사했다. 아울러 포스트식민주의는 서구중심주의를 가짜 보편주의라고 폭로했다. 이후 이 입장들은 서발터니티를 통해 역사와 시대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론과 실천의 활력을 제공했다. 서발터니티를 역학이라는 개념과 결합하게 되면, 기존 체계의 분열과 새로운 통합이라는 순환구조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2.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의 의의와 연구사적 맥락

지난 몇 년 사이에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15) 그렇다면 이 논문이 언급하는 관문도시는 서발터니티라는 존재를 생산하는 공간 또는 장소의 방법, 즉 ‘방법으로서 관문도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침묵을 강요당한 취약한 존재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터져 나왔다. 한국에서는 일본군 중군위안부나 노동자 강제연행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쟁점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연대 시위, 변희수 하사 사건을 비롯한 많은 성소수자 관련 사건, 난민 승인 문제나 새터민 수용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건, 지속적인 미투 운동 등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도 이른바 쑤허(三和)청년이라 불리던 일용직 신노동자(新工人) 문제, 도시 하층민을 의미하는 저단인구(低端人口) 퇴거 사건이 발생했고 펑쑤이(彭帥)의 미투 사건과 같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중국의 대표적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수용 문제 등이 폭로되었다. 대만에서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원주민 이름 찾기 운동, 대만판 n번방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현대 일본에서도 피차별 부락민, 여성, 한센병 환자, 장애인, 아이누 민족, 재일코리안, 오키나와인, 원폭 피폭자 등 차별받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동아시아에서 취약한 존재들이 당하는 폭력적 차별의 문제, 즉 서발터니티 이슈를 외면한 채 동아시아 인권이나 평화를 말할 수 없다. 더욱 주목할 것은 권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한 서발턴의 목소리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동시대적인 쟁점으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취약한 존재들의 문제가 동아시아 리저널의 공공성과 직결되는 이슈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서발터니티를 생산하고, 이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한 권력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와 동시에, 서발턴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그린비 + ‘연구공간 수유+너머’ 2007; 2008).

이처럼 동아시아의 취약한 존재들 즉, ‘동아시아 서발터니티’¹⁶⁾의 문제는 새로운 동아시아 공공성과 시민성 구상에 핵심이다. 현재 동아

16) 이 논문은 ‘동아시아 서발터니티’를 동아시아 각국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부재(不在)처리되거나, 저항의 목소리를 내도 차별받아온 취약한 사회적 존재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는 서발터니티라는 개념의 동아시아라는 리저널 맥락을 강조하여 호명한 것이다.

시아는 형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시민권을 쟁취한 듯하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약자와 소수자들은 실질적으로 시민 취급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폭력적으로 제압되거나 배제되었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다. 동아시아 서발터니티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 심지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들의 성격을 통칭하는 존재론적 특성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동아시아 서발터니티가 동아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중층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모체는 근대 이전의 유교·한자 문화권이나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체제 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오늘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서구 열강 세력에 의해 근대 체제로 강제 편입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서구와 달리 연속적인 리저널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었다. 동아시아라는 실체는 식민/제국주의, 그리고 이와 결부된 서구화로서 근대화, 나아가 국제적인 냉전질서라는 거대한 단절을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다른 제3세계 권역과는 다른 특징도 갖고 있다. 이점이 동아시아 리저널 정체성에 접근하기 위해 중요하다. 동아시아는 다른 제3세계와는 달리 압축적 근대화에 성공해 서구 식민/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이 된 일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 근대화를 통해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스스로 타자화했다. 그 대표적인 테제가 바로 탈아입구(脫亞入歐)다. 이후 일본은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근대화를 선물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역내 식민 지배를 자행했다(마루카와 데쓰시 2008).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는 제국주의 열강(일본), 반식민지(중국), 식민지(한국, 대만), 내지화(오키나와) 등 다양한 층위의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체제가 해체된 20세기 중반 이후, 냉전 체제에 의해 동아

시아는 적대적 이념 대립을 당연시하면서 분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남한, 대만 등은 미국의 지원 하에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발전에 성공하여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이 되었고, 중국, 북한 등은 소련의 지원 하에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도모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독자 노선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후 탈냉전 구조 하에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는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으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문제에는 동아시아만의 복잡한 역사 구조가 반영된 다층적인 차별과 혐오가 있다. 예컨대 동아시아 서발터니티는 서구 제국주의뿐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지배라는 폭력의 결을 동시에 새기고 있다. 여기서 식민지, 반식민지 민족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등장했다. 이에 더하여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문명과 야만의 경계가 그어졌고, 야만으로 간주된 존재들을 향한 새로운 폭력이 생산되었다. 아울러 동아시아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난민, 원주민 혹은 소수민족 등에 대한 탄압도 작동했다.

근대화는 곧 개발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동아시아의 압축적인 자본주의 발전 과정은 일반적으로 빈곤한 노동자, 농민 계층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아시아에서 보편화된 개발독재 체제는 동시에 철거민, 무직, 노숙 상태의 도시 빈민의 목소리를 묵살하였다.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문제는 동아시아 외부의 충격 이상으로 동아시아 내부 특히 동아시아 각국 내부의 폭력 체제 구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내부의 폭력 체제는 동아시아가 냉전 구조 안으로 휘말려드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억압과 차별을 발생시켰다. 이데올로기 문제로 사상범 및 관련 가족(납북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 같은 탄압이 발생했던 것이다.

냉전이 해체되고 동아시아 각국이 자본주의적 급성장을 이룬 이후에도 근대화된 동아시아에는 여전히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현안들이 존재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서발터니의 이슈들도 다수 등장했다. 중군위안부 여성이나 원폭 피해자들과 같이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서 형성된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하는데다가, 탈북자, 난민,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족 등 이주민과 관련된 문제들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에서 젠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슈로 남아 있으며, 한센인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성병과 에이즈(AIDS), 코로나 팬데믹 등 다양한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차별도 발생했다.

이러한 차별을 생산했던 것이 바로 동아시아 정상성 담론-권력이다. 동아시아 정상성 담론-권력의 다양한 형태를 식민/제국의 관점에서, 근대성의 관점에서, 냉전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가주의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등의 관점에서 접근한 개별 연구는 많았다. 하지만 동아시아 리저널 정체성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밝히려는 시도는 없었다. 이는 역으로 동아시아 리저널 정체성과 동아시아 정상성 담론-권력이 체계적 연구대상임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가 생산해냈던 취약한 존재들, 즉 서발터니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개념은 동아시아 리저널 정체성을 폭로할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나 서구 중심의 지구적 보편성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등장한 취약한 존재들의 문제 즉, 서발터니티 이슈에 대한 연구 상황은 어떠할까? 동아시아의 취약한 존재들과 관련된 유사한 연구는 적지 않다. 우선 한국의 인문학계와 사회과학계에서 소수자의 문제나 취약한 존재들의 문제를 연구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한국 근현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서발턴 분석(김희숙 2017; 2018; 2020; 2021; 유임하 2015; 김학균 2013)은 축적되어 있으나, 역사학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서발턴을 연구한 사례는 박정희 시대의

다양한 서발턴을 연구한 사례(김원 2006; 2011)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물며 이를 서발터니티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종합하려는 연구는 없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도 비슷하다. 다만, 대만에서 근·현대를 망라해 원주민·여성·빈곤층·이주민 등에 관한 연구는 축적된 상태다. 특히 식민지 부랑자 연구(王昭文 2003; 廖于蘋 2014)나 기층사회 형성과 원주민에 대한 사회적 폭력(許達然 1996; 朱家驊 2009) 등은 주목되는 연구주제들이다. 최근 대만사 연구는 서발터니티 문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만사 연구의 주제, 경향은 서발터니티 문제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간주된다. 대만의 서발터니티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대만으로 이주, 경제환경의 변화,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정치 주체의 변화, 권력의 확장 등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 사회 내부에서 종족과 신앙, 족군(族群) 등의 문제가 대만의 서발터니티 발생과 사회갈등의 지표가 되기도 했다(김봉준 2023, 122-123)

중국에서 서발턴 연구는 주로 저층(低層)이라는 개념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저층 연구는 주로 개혁개방 시기에 진행되었다. 이후 저층 연구는 2000년대에 다시 유행한다. 농촌연구의 현실을 결합한 저층 연구(于建嵘 2001, 2007; 郭于华 2002, 2008), 토지권이나 환경오염, 인신매매 등 르뽀 형식의 연구(余治平 2014; 陈燕谷 2005)가 그렇다. 하지만 중국의 저층연구는 차별과 폭력을 방조하는 체제의 문제를 크게 다루지 못하고 개발주의 신화나 성장주의 관점에서 저층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진 연구가 많다. 그만큼 중국의 연구에서 서발터니티는 특정한 관점에서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졌다(장윤미 2023).

그래서 현대의 관점에서 서발터니티에 접근하는 연구는 매우 적었다. 그나마 약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연구들은 문학이나 에스노그래픽 연구들(廖义武 2001; 叶照青, 朱大印, 耿昌军 2004; 秘舒 2006)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에이즈 문제 등 개발 관료주의에 저항하는 약자들에 대한 연구(王洪伟 2010),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떠오

른 청년이나 여성 문제를 다룬 연구(潘毅 2011; 陶艳兰 2011; 洪理達 2015),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서발틴 주체성의 문제에 주목한 새로운 연구 경향(郑雯, 施畅, 桂勇 2021)이 일부 등장하고 있다.

그나마 일본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다수 있다.¹⁷⁾ 하지만 일본의 서발터니티 관련 연구도 여전히 다양한 개념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 이를 서발터니티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의 역학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실체가 가려진 경우도 여전히 많아 아직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태다. 더군다나 동아시아 전체의 시각에서 이들을 다루려는 시도는 더욱 없다. 나아가 이 존재들을 동아시아의 연대와 공공성의 비전의 한 결로 엮어낸 연구도 적다.

사실,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제국주의, 냉전 이데올로기 하에서 국가권력, 급속한 권위주의적 경제발전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공통적으로 경험했고, 여기에 편승하려고 노력했던 경향이 크다. 연구 경향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갔다. 그래서 동아시아 연구 역시 동아시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이러한 상황만을 비판하는 경향으로 흘렀다.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의 거대한 흐름 ‘이면에서’ 고통 받는 소수 문제에 천착하는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동아시아 거대 비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취약한 존재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연구는 이제 각기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새로이 집대성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에 힘입어 동아시아의 서발터니티 연구를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시민성과 공공성의 구현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을 자

17) 일본의 서발터니티 관련 연구는 최근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이 출판한 번역서와 연구총서의 내용과 참고문헌 등을 통해 비교적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의 번역서인 구로카와 미도라·후지노 유타카의 『차별의 일본근현대사-포섭과 배제의 사이에서』와 히로타 마사키의 『차별로 보는 일본의 역사』는 일본의 근현대사속에서 형성된 일본의 다양한 서발틴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구로카와 미도라·후지노 유타카 2022; 히로타 마사키 2022).

극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정체성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는 미/중 사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대안적 동아시아 담론을 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아닌 동아시아 초국적 시민의 자율성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정체성과 공공성, 그리고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Ⅲ. ‘방법으로서 관문도시’와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

1. ‘방법으로서 관문도시’

“경계는 살기에 안락한 장소는 아니다... (중략). 경계는 배제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하는 장치인 동시에 사람들을 선별하고 거르는 포섭의 장치이며 상이한 순환의 형식이기도 하다.” (산드로 메자드라, 브렛 닐슨 2021, 29-30)

위 인용문에서 보듯, 경계지 연구는 권력 작동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계’는 단순히 연구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관점으로도 유용하다. 아울러 ‘경계’는 일종의 인식론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권력 비판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포함/배제라는 권력 작동의 메커니즘과 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경계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계는 지배와 강탈, 착취의 관계들이 어떻게 현재에 이르러 재정의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돕는 것뿐 아니라, 이처럼 변하는 관계들을 둘러싸고 형태를 갖춰가는 투쟁들도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돕는다(산드로 메자드라, 브렛 닐슨 2021, 46).

여기서 ‘방법’(方法)이란 일본의 근대사상사 연구에서 사용되어 유행된 개념이다. 중국학 연구자였던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가 제시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는 서구의 근대화 모델을 추종해온 일본 사회를 새롭게 보기 위해 아시아를 하나의 방법으로 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아시아 특히 중국의 역사 경험과 사상 자원을 ‘방법’으로 삼아 아시아와 일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던 시도였다(다케우치 요시미 2004, 140-169).

그렇다면 특정 장소의 정체와 권력 작동을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 ‘경계’를 하나의 방법으로 삼는 것도 좋겠다. ‘방법으로서 경계’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관문도시를 대표적인 경계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다. ‘방법으로서 관문도시’라는 관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했다. 관문도시가 동아시아의 서발터니티를 어떻게 생산했는지, 어떤 식으로 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권력의 정체와 권력 작동 역학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관문도시란 급속한 근대화가 이뤄지던 시기에 서로 다른 두 지역이 만나는 접점(接點)에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¹⁸⁾ 관문도시의 기능은 이중적이다. 우선, 관문도시는 항만, 철도, 도로 및 항공 교통의 주요 결절에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관문’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관문도시는 산맥, 하천, 해안선과 같은 자연적 장애 혹은 국경과 같은 인문적 장애가 지리적으로 어떤 지역 간의 물적, 인적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박경환 2006, 53-54).

따라서 관문도시는 이음과 단절의 이중성이 작동하는 장소다. 관문도시는 국민국가(national state) 혹은 동아시아 리저널 단위의 문(gate)에 해당한다. 게오르그 짐멜의 말을 조금 응용하면, 문은 열면 길이 되고 닫으면 벽이 되는 권력의 장치다(게오르그 짐멜, 2005. 266-270

18) 일찍이 20세기 초부터 여러 공간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관문(또는 관문도시) 이론은 오랫동안 지역 및 도시 관련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관문도시 연구는 관문도시를 글로벌 및 동아시아 리저널 단위의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허브(hub)’로만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참고).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위치한 관문도시인 단둥(丹東)은 압록강 대교라는 물리적 연결고리를 통해 이음과 단절이 반복되었다. 주로 전면적 개방을 원하지 않았던 북한 권력 당국의 태도에 따라 이음과 단절 여부가 결정되곤 했다.

단둥과 같은 관문도시는 동북아시아 관계의 결절에 해당되는 만큼 북한과 중국 양국 관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¹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중국의 권력 당국이 중국의 대표적 관문도시 상하이를 봉쇄했을 때 공포를 느낀 것은 상하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상하이(上海)를 자주 왕래했던 동아시아인들이 폐쇄공포증 같은 감정을 공감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관문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가 많은 이들에게 큰 장벽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관문都市는 일종의 전초기지이자, 새로운 충격을 실험하는 테스트 베드(test-bed)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시도한 개혁개방, 즉 시장화의 실험이 선전(深圳) 등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관문도시들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에 대한 적대적 민족주의 감정이 서슬 푸르던 시절에도 일본 문화가 일찍부터 유입되어 유통되던 곳이 한국의 해양 관문도시 부산이었다.

관문도시가 일단 국가권력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용되면 국수적인 국가주의(nationalism)를 구현한 장으로 기능한다. 특히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억압하면서 국가주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험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모든 경계를 초월하여 하나의 통일된 공

19) 단둥이 북-중 양국관계만이 아닌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얹혀있는 동북아시아 관계 전반을 상징하는 관문도시이다. 이는 중국이라는 통로를 이용해 타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 때문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단둥의 위치가 내륙과 동북아시아 각지를 잇는 해륙의 결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권경선, 최낙민(2018)을 참고.

간을 상상하는 글로벌리즘(globalism)은 물론이고, 초국적인 동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리저널리즘(regionalism)은 아예 소원한 일이 된다. 반면, 관문도시가 개방적으로 운용되면 그 공간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혹은 리저널한 시민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실험과 혁신의 장으로 변한다. 이로써 그동안 국가로부터 배제된 다양한 존재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연대도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방법으로서 관문도시’라는 인식들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시민성과 공공성 구축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동아시아 관문도시의 장소성- 부산과 중화권 관문도시²⁰⁾



20) 이 그림은 대표적 관문도시의 예를 두 저자가 선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임을 밝힌다.

예를 들면 부산이라는 관문도시의 사회사를 연구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부산이라는 지역사(local history)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리저널 역사(regional history) 혹은 글로컬사(glocal history)를 연구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 부산과 같은 동아시아 관문도시는 동아시아 리저널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전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방법으로서 관문도시’를 통해 동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하는 창(窓)이 열리는 셈이다.

2. 동아시아 관문도시와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

국가권력이든 자본권력이든, 권력은 공간을 분절하고 공간을 차별화한다. 동아시아 근대 권력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아시아에서 관문도시는 근대 문명과 문화를 처음으로 누리긴 했지만,²¹⁾ 일본 제국주의의 힘으로 인해, 그 향유는 차별적인 것이었고, 그 차별의 힘이 공간적으로 구현되었다. 예컨대 개항장으로 대표되는 근대 초기 동아시아의 피식민 지역의 관문도시에서 근대 문화의 향유는 식민자들의 거주 공간에서 구현되었고, 피식민자의 공간은 여전히 열악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낳았다(오미일 2017, 27). 외부로 향한 강제 개방과 내부의 차별적 분절화가 동아시아 관문도시에 관철되던 권력의 양상이었다.

동아시아가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권력에 의한 공간의 분절과 차별화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관문도시들은 동아시아 국가 발전 전략에 힘입어 외부로 개방될 수밖에 없었다.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산업화를 진척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관문도시의 개발은 국민국가 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개발과정 중에 개발이 시급했던 도심과 달리 변두리 지역은 차별과

21) 근대 초기에 동아시아에서 관문도시 역할을 수행했던 곳은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열린 개항장 도시들이었는데 이 도시들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전기, 철도, 도로, 하수도, 우체국, 공화당 등의 도시기반 시설이 구비되었다.

추방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관문도시는 외부적으로는 유입/유출의 권력이 작동했고, 내부적으로는 중심/주변을 둘러싼 추방과 차별의 권력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인적 구성도 달라졌고, 거주민들 사이의 권력 관계도 달라졌다.

예컨대 부산의 경우, 개항 이전까지 일본인의 출입은 부산포의 왜관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이후에는 점차 일본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이후 인근 지역으로 그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송정숙 2011). 관문도시 부산의 근대화는 이처럼 일본의 제국주의 권력에 의해 일본에서 인구와 물자 이동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형성되었다.²²⁾ 오늘날에도 국민국가가 사람들의 삶을 제도화하는 기본 단위인 만큼, 동아시아의 관문도시는 이방인의 이동을 통제하고 허용하는 국민국가의 권력을 대표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경계를 넘는 이주민들은 출입국 관리의 통제 대상이며, 국경과 같은 경계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신원 불명자들 또한 여전히 사회적 성원권 부여의 심사대상이다(바우만 2003; 조경희 2013, 218).

오늘날 지구화(globalization)의 대세로 인해 ‘이주의 시대’가 열렸고, 이에 발맞춰 국가는 한편으로 ‘다문화주의’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독려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이주민들을 불온한 세력으로 간주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심지어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배타적 민족주의나 배외주의 감정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이민족 혐오 감정이나 폭력이 조장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2) 제국주의는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국적’ 영토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탈(脫)국민적 내지 초(超)국민적 사유와 활동의 장을 창출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 국민국가가 다른 국민국가를 일방적으로 침략하여 포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민 간의 대립을 야기하고, 그 대립을 통해 민족을 만들어내며, 모든 사유와 활동을 민족 간 대립관계 속으로 밀어 넣는다. 식민지에서 민족이 탄생하는 것은 정확하게 국민적 경계를 넘어서려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에 의한 것이다. 즉 식민지 인민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민족’의 경계를 지우고자 했던 제국주의라는 것이다(이진경 2010, 364-365).

지구적 이주의 시대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는 관문도시에 그대로 관철된다. 현재 동아시아의 관문도시는 이러한 국가 권력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다.

중국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좀 더 특수하다. 통제와 허용의 권력 역학은 국외 이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상당수의 국내 이주자들이 해당 지역의 호구(戶口)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배제를 겪었다. 이들은 같은 중국민이지만 국제이주노동자와 유사한 ‘2등 시민’(second citizen)의 지위에 처하면서, 수많은 사회적 불만과 불평등을 감내했다(윤종석 2023). 중국의 국가 권력은 이들의 이주를 허용하지만, 차별도 당연시하고 있다. 이들이 권력에 저항할 경우 강력한 통제가 가해진다. 사회주의 중국의 개혁개방이 동부 연해의 관문도시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관문도시들에서는 이러한 도시 내/외의 권력 관철이 매우 적나라하게 작동한다.

동아시아의 관문도시는 이처럼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 등 현대 동아시아 사회체제의 기원이 시작된 역사적 ‘장소’다.²³⁾ 물리적 범위를 의미하는 ‘공간’과 달리 장소는 역사-사회-문화적 의미와 같은 질적 의미를 가진 생활세계를 말한다. 펠프에 따르면 이러한 장소는 인간실존의 근본적 토대다(펠프 2005). 동아시아의 관문도시를 경계 ‘장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관문도시가 생산한 다양한 서발터니티 문제에 대한 (국가권력이든 자본권력이든 아니면 사회적 권력에 의한 것이든) 배제와 포함의 역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3) 근대 불평등조약의 결과 설치되었던 개항장은 대량생산된 상품, 서양문물과 사조가 유입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투입구였다. 이곳으로부터 확산된 자본주의 경제적 양상과 서구 사조의 전파는 점차 전통사회의 정치경제제도를 균열시키고 사회체제를 해체시키는 단서로 작용했다. 개항장도시는 서양문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또한 제국주의자와 식민주의자들에 의한 생활공동체 파괴와 폭력을 일상적으로 체득하는 곳이기도 했다(오미일 2017, 26-27).

이를 통해 동아시아 리저널 차원의 시민성과 공공성의 향방도 전망해 볼 수 있다(이흥규 2021). 한국, 중국, 대만 등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전제 왕정과 제국주의 침탈, 전쟁과 분단, 냉전과 급속한 산업화, 탈냉전과 신자유주의라는 복잡한 역사적 관계망 속에서 서발터니티 이슈가 중층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부산, 가오슝, 상하이, 홍콩, 홍콩 등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관문도시들이 겪은 복잡한 권력 작동의 역학을 연구하면서, 각 장소에서 생산된 다양한 서발터니티 이슈를 포착한 후, 이를 분석하면, 동아시아라는 리저널 차원의 시민성이나 공공성을 위한 단초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차적으로 동아시아 관문도시 중 한 곳인 부산에서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 및 그 변화 여부를 추적하고, 그 여파가 동아시아의 다른 관문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부산만이 아닌 다른 동아시아 관문도시 입장에서 그 역학관계를 살펴본 후 이를 상호 검증해본다. 끝으로 이러한 상호 검증과정을 다양한 관문도시에 적용한 후, 이를 통해 향후 동아시아의 시민성이나 공공성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단초를 추적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히 말해, 부산 등 동아시아의 관문도시들에서 이민족이나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한다면 동아시아에 시민성 혹은 공공성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가 혐오와 홀대로 가득해지면 동아시아에서 시민성이나 공공성이 구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실천의 연속으로 동아시아에서 초국적 시민 연대가 구축되면, 환대와 홀대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버려나간다면, 동아시아 관문도시와 서발터니티 연구는 동아시아 시민성과 공공성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자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V. 소결

동아시아에는 각국 차원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역사적 문제와 상처들이 많다. 제국주의의 잔재, 한국전쟁과 냉전으로 이어진 체제대결의 관성, 신자유주의 양극화까지 나타나면서 서로 혐오하는 감정의 뿌리가 심각하게 얽혀져 있다. 심지어 오늘날 미/중 신냉전의 조짐으로 동아시아 내 국가 간 대립이 다시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상호 혐오와 적대의 정치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복잡하게 형성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 피식민지에서 민족이 탄생한 것은 피식민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를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반면 제국의 입장에서는 내부 민족 간 경계를 지우고, 새로이 통일된 하나의 ‘민족’을 생산하기 위함이었다(이진경 2010, 364). 오늘날에도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소환되는 동아시아의 비전 중 일부는 근대 이전 제국으로서 사대(事大)를 강요하는 중화제국에 대한 상상이며, 다른 일부는 근대 이후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공포이다. 2차 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세계 패권을 다투던 냉전 제국 미국과 소련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며,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시대인 지금 강대국들의 모습에 과거의 제국주의적 그림자에 대한 우려도 스며있다.²⁴⁾

이처럼 어두운 현실을 돌파하면서, 서구중심성에 투항하지 않는 길은, 동아시아 서발터니티한 존재를 **환대함**으로써 동아시아만의 새

24) 동아시아의 다양한 위기는 그동안 국가와 자본이 주도해온 것으로 기존의 국익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위기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공익이나 공공선 추구의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자본들은 자신의 자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아시아지역주의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다(이흥규 2021, 137-138).

로운 공공성을 정립하고 구현하는 일이다. 이는 아울러 새로운 시민성을 발명해 나가는 부단한 과정이다. 따라서 서발터니티에서 출발하는 이런 방식의 연구는 상향식(bottom-up)의 연구일 수밖에 없다. 서발터니티를 통한 공공성 구현은 동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누리고 공유하는 가치가 될 것이다.

이는 도달할 목표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과정’이자 ‘방법’이다. 서발터니티는 역학적 방법이고, 이 방법의 연속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매번 새로 써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지속적 공공성 형성을 통해 부단히 새로운 시민들이 탄생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공공성은 매번 새로운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귀환할 수 있는 역학적 장이어야지, 완수되어야할 이상이나 이데올로기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 중심적 동아시아 기획이나 담론과는 다른 결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이흥규 2022).

동아시아 각국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부재(不在)처리되거나, 저항의 목소리를 내도 차별받았던 취약한 사회적 존재들의 문제를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이슈로 드러낼 때, 동아시아 시민공공성 혹은 동아시아 민주공공성은 ‘매번’ 자신의 발판을 새로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관문도시이다.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가 동아시아 시민성과 공공성 연구를 위한 존재론적 층위의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 관문도시 연구는 동아시아 시민성과 공공성 연구를 위한 장소적 층위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인식론적 방법이기도 하다.

이 장소에서 작동하는 결정권력, 즉 취약한 존재를 환대할 것이냐, 배제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권력의 실체를 연구하고 비판함으로써, 이 연구는 동아시아 리저널 단위의 민주적 공공성 실현에 다양한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과 시민의 연대가 작동하기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을 동아시아 서발터니티와 관문도시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바로 여기가 동아시아 민주적 공공성이라는 부단한 여정을 시작하는 진수(進水)의 장이기 때문이다.

투 고 일: 2024년 01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4년 02월 07일

게 재 확 정 일: 2024년 02월 08일

참고문헌

- 고병권, 2007. 그린비 편집부 편. “R을 쓴다”. 『소수성의 정치학』, 그린비.
- 구로카와 미도리·후지노 유타카. 김영주·문명재·양익모·이경화 역. 2022. 『차별의 일본근현대사- 포섭과 배제의 사이에서』. 제이앤씨.
- 권경선, 최낙민. 2018. 『단둥, 단절과 이음의 해항도시』. 선인.
- 그린비 편집부 편. 2007. 『소수성의 정치학』. 그린비.
- 그린비 편집부 편. 2008.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대중의 소수화』. 그린비.
-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역. 2005. “다리와 문”.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 김원. 2006.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 _____. 2011. 『박정희 시대의 유명들 -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
- _____. 2012. “서발턴(Subaltern)의 재림 - 2000년대 르포에 나타난 99%의 현실.” 『실천문학』 105. 192-206.
- 김비환. 배항섭·박소현·박이진 편. 2016.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현황과 새로운 이론 모색” 『동아시아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성균관대출판부.
- 김동규. 2017. “호러리즘과 임계적 공공성.” 『대동철학』 179집. 169-193.
- _____. 2020. “트라우마와 연대: 상처 받을 수 있음의 공공성.” 『대동철학』 제91권. 27-62.
- _____. 2021. “상처받을 수 있는 주체: 대칭성과 비대칭성 윤리 사이에서.” 『철학연구』 제128집. 63-95.
- _____. 2023. “서발터니티라는 방법”.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369-402.
- 김봉준. 2023. “타이완의 서발터니티 연구.”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제2차 국내학술대회 자료집-방법으로서의 관문도시와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

- 김택현. 2003.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 출판사.
- _____. 2012. 『트리컨티넨탈리즘과 역사』. 울력.
- 김학균. 2013. “『서울은 만원이다』에 나타난 도시의 ‘서발턴’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1집. 343-368
- 김희숙. 2017. 『황석영 텍스트의 탈식민성 연구』. 부산대학교출판부.
- _____. 2018.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서발턴 연구』. 부산대학교출판부.
- _____. 2020. 『<고향>을 통해 본 서발턴의 형성과 저항』. 부산대학교출판부.
- _____. 2021. 『해방공간의 안희남 텍스트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농민의 비애〉와 <폭풍의 역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 백지운. 2004.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 마루카와 데쓰시. 백지운 외 역. 2008, 『리저널리즘: 동아시아의 문화지정학』. 그린비.
- 박경환. 2006. “제2장 관문도시의 이론적 기초와 인천의 발전방향”. 인천발전연구원(편). 『동아시아 관문도시,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슬라보예 지젝, 주디스 버틀러,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박미선, 박대진 역. 2009.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 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 도서출판 b.
- 박도영. 2014. “규제적 이념은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 도래한다: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에 대한 소.”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1, no.4, 통권 36호. 134-158.
- 백영서. 2022.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 대안체제의 길』. 나남출판.
- 송정숙. 2011. “개항장으로서의 부산항과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권 1호. 273-298.
- 에드워드 펄프. 김덕형 외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오미일. 2017. 『제국의 관문 - 개항장도시의 식민지 근대』. 선인.
- 유임하. 2015. “김사량의 <노마만리> 재론 - 서발턴의 탐색에서 제국주의와의 길항으로”. 『日本學』 제40권.

- 윤여일. 2016. 『동아시아담론: 1990-2000년대 한국사상계의 한 단면』. 돌베개.
- 윤종석. 2023. “중국의 거대한 인구이동과 새로운 도시화의 실험: ‘사람의 도시화’를 중심으로.” 『다양성+Asia』 20호. <https://diverseasia.snu.ac.kr/?p=3197>
- 월터 미홀로. 이성훈 역. 2013. 『로컬 히스토리 글로벌 디자인』. 에코리브르.
- 이진경. 2010. 『역사의 공간 - 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사건적 사유』. 휴머니스트.
- 이흥규. 2020.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평화: 역사, 구조, 함의.” 『아시아연구』 제23권 4호. 113-131.
- _____.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편. 2021. “동아시아 시민성을 향한 모색-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 『동아시아 시민성을 향하여-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모색과 전망』. 소요-You.
- _____. 2022. “동아시아 공공성은 가능한가? - 새로운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사상적 기반.” 『아시아연구』 제25권 2호. 209-226.
- 자크 랑시에르. 안준범 역. 2021. 『프롤레타리아의 밤: 노동자의 꿈 아카이브』. 문학동네.
-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2013.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 _____. 진태원 역. 2015. 『불화: 정치와 철학』. 길.
- 장윤미. 2023. “중국의 서발턴 연구 : 개념, 주제, 쟁점”. 『중소연구』. 제47권 1호. 59-101.
- 조경희. 윤영도·이정은·조경희 편. 2013. “도쿄 우에노의 로컬리티 형성과 이동하는 하층민들: 공원과 시장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접촉지대- 교차하는 경계와 장소들』. 그린비.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 _____. 김향 역. 2009. 『예외상태』. 새물결.
- 지그문트 바우만. 김동택 역. 2003. 『지구화, 아누스의 두 얼굴』. 한길사.

- 산드로 메자드라, 브렛 닐슨, 남청수 역. 2021. 『방법으로서의 경계 - 전지구화 시대 새로운 착취와 저항 공간의 창출』. 갈무리.
- 채오병. 2019. “비서구사회의 존재방식과 그 인식의 문제-포스트식민주의 사회이론의 가능성.” 『사회와 역사』 제124집.
- 최성희. 2014. “끊임없이 귀 기울이길 요청하는 서발턴.” 『코기토』 75.
- 칼 슈미트. 김항 역. 2010.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그린비.
- 과메 앤서니 애피야. 실천철학연구회 역. 2008. 『세계시민주의: 이방인들의 세계를 위한 윤리학』. 바이북스.
- 한국 프랑스철학회. 2018. 『현대 프랑스 철학사』. 창비.
- 홍성식. 2013. “서발턴에 대한 진실한 기록, 1970년대 르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2집.
- 히로타 마사키. 이권희·이경화·김경희·오성숙·김경옥·강소영 역. 2022. 『차별로 보는 일본의 역사』. 제이앤씨.
- Gayatri Chakravorty Spivak.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Macmillian.
- Gyan Prakash. 2000. “The Impossibility of Subaltern History.” *Nepantla: Views from South*. vol. 1, issue 2. 287-294.
- Julian Go. 2000. *Postcolonial Thought and Social Theory*. Oxford Uni. Press.
- 于建嵘. 2001. 『岳村政治：转型期中国乡村政治结构的变迁』. 商务印书馆.
- _____. 2011. 『底层立场』, 上海三联书店.
- 郭于华. 2002. ““弱者的武器”与“隐藏的文本”——研究农民反抗的底层视角”. 『读书』 2002年第7期: 11-18.
- _____. 2008. ”倾听无声音的底层“ 『读书』, 2008年6期: 37-44.
- _____. 2008. “作为历史见证的“受苦人”的讲述”. 『社会学研究』, 2008年1期: 53-67.
- 余治平. 2014. 『萬集鄉下這些年：中国底层社会治理的微观叙事与个案研究』. 上海三联书店.

陈燕谷. 2005. “序二：关于“庶民”的历史”. 刘健芝, 许兆麟选编. 『庶民研究』中央编译出版社.

廖义武. 2001. 『中国底层访谈录』. 长江文艺出版社. 2001.

叶照青, 朱大印, 耿昌军. 2004. 『来自中国社会底层的报告』. 长江文艺出版社. 2004.

秘舒. 2006. “困境中的选择与选择中的困境——关于“新失业群体”择业与失业逻辑的研究”. 『青年研究』. 2006年8期: 14-20.

王洪伟. 2010. “当代中国底层社会“以身抗争”的效度和限度分析——一个“艾滋村民”抗争维权的启示”. 『社会』. 2010年2期: 215-234.

潘毅. 2011. 『中国女工：新兴打工阶级的呼唤』. 九州出版社.

陶艳兰. 2011. “无名者生命的诗：中国女工多元主体的形成与抗争”. 『社会』. 2011年05期: 226-242.

洪理達. 2015. 『中國剩女：性別歧視與財富分配不均的權力遊戲』. 八旗文化.

郑雯. 施畅. 桂勇. 2021. ““底层主体性时代”：理解中国网络空间的新视域”. 『新闻大学』. 2021年10期: 16-29.

許達然. 1996. “械鬥和清朝台灣社會”. 『台灣社會研究季刊』 23: 1-81.

廖于蘋. 2014. “臺灣婦人慈善會研究”. 『清華大學歷史研究所學位論文』. 2014.

王昭文. 2003. “殖民體制下的社會改革理想實踐—以日治時代的愛愛寮為例”. 『輔仁歷史學報』 14: 197-235.

朱家嶠. 2009. “日治初期之前居臺漢人分佈特質成因再探—以宜蘭擺厘陳氏家族為例”. 『人文及管理學報』 6: 63-94.

참고사이트

『Online Etymology Dictionary』 subaltern 어원:

https://www.etymonline.com/word/subaltern#etymonline_v_22241

『Online Etymology Dictionary』 alter 어원:

https://www.etymonline.com/word/alter#etymonline_v_10924

Abstract

An Introduction for a New East Asian Discourse

- East Asian Subalternity Studies and 'Gateway Cities as a Method

Lee Honggyoo, Kim Donggyu
Dongseo University

The intensification of hegemonic competition in US-China relations has made it difficult to pursue a state-centered East Asia discourse that emphasizes national interests. A new discourse on East Asia that centers on civil society and seeks an alternative East Asian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make this transition,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voiceless, excluded, and discriminated against in East Asia, namely East Asian subalternity. The issue of East Asian subalternity should be studied to reveal the violent structures they are subjected to. Only when this issue is highlighted as a common East Asian issue will a civil society-centered East Asian discourse be formed. We also propose the concept of 'gateway city as a method' a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East Asian subalternity. By recognizing the gateway city as a space of power where the dual nature of open/closed and connect/disconnect operates, the 'gateway city as a method' can provide a new opportunity to study the issue of East Asian subalternity to build citizenship and publicity space in East Asia.

Keywords: East Asia, Subalternity, Gateway Cities as a method, East Asian Discourse, Civil Society